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4/ 10 통권 167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핑퐁 외교와 핫도그 외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금액에 결국 2.7%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종결 된다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대표이사의 배당포기로 인해 초과배당을 받게 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등 주주는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p.11)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 〈법인의토지·용도·현황별 사업용·비사업용 판단방법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추가과세)〉

토지·용도	비사업용 분류 · 열거범위와 적용세율(10% 추가세율)	사업용 간주
나대지 양도	부동산 매매업 · 개발 · 분양업도 비사업용	법령상 제한(시행규칙 제46조의2)
주거용 주택	일반주택 · 아파트 · 별장 등 20% 추가세율, 미등기는 40%	5년 이상 임대주택, 공공임대 등
건물정착	임대용, 타인임대부분, 건물정착면적 기준 초과분	사업용 부동산(공장, 사무실, 자기실제사용분)은 사업용
농지 등	농업이 주업 아닌 법인의 논 · 밭 · 과수원	농업이 주사업인 법인 소유분
임야	임업비주업자,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 도시편입일 3년 지난 경우	임업주업법인, 채종림 등
목장·용지	축산비주업법인,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 초과	축산주업법인, 기준면적 내
기타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토지 등	재산세 비과세 · 면제 · 별도합산 · 분리과세부분
업무간접	체육시설 기준 초과 토지, 부설주차장 기준면적 초과	체육시설용 토지(선수 · 종업원), 주차장용
겸용주택	주택부분 지역별 기준초과 토지	사업용 건물 안분토지
별장토지	별장부속토지(바닥면적 10배까지), 초과부분은 나대지임	해당 없음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70호 / 주간 15호

2024. 4. 10.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의 토지 용도 현황별 사업용 · 비사업용 판단방법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추가과세)	표지
C E O 에 세 이	핑퐁 외교와 핫도그 외교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시상금 -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입니다 - 직원 영어교육비 처리 문의 - 구매확인서 구매일 및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설문조사 대가로 지급하는 상품권 기타소득 신고 여부 -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금액에 결국 2.7%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 액으로 종결 된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여야 세제 지원 공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8 9
직장인 Survival	나태함을 극복하는 법 7가지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 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사전법규소득-1170, 2023.03.09)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 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866, 2023.05.31)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조기환급금 지급 5월 3일까지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대표이사의 배당포기로 인해 초과배당을 받게 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의 자녀 등 주주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11
세 무 정 보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14 20 23
회 계 정 보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 고,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27 32 37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 핑퐁 외교와 핫도그 외교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맛있고 싹 중국산 산둥(山東)식 월병(月餅)을 선물 받았다. 월병은 매실, 호두, 잣과 건포도 등을 으깨고 섞어 구운 밀가루 과자다. 정초 때는 폭죽(爆竹)이고 월병하면 중국 중추절의 대명사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음식도 제각각이다. 산둥요리, 허난(湖南)요리, 쓰촨(四川)요리, 푸젠(福建)요리, 광둥(廣東)요리, 장쑤(江蘇)요리, 저장(浙江)요리, 안후이(安徽)요리 등 8대 요리가 있다.

세계적으로 음식이 발달한 나라는 중국과 프랑스다. 풍요로운 자연조건 외에 독재와 귀족문화가 발달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는 설이 있다. 외교전쟁 속에는 세계 4강국의 이해가 맞부딪치고 남·북한의 사황이 달려 있다. 새롭게 세계 강자로 솟아오른 중국은 과연 한국에 있어 무엇인가? 거대한 대륙국가 옆에 붙어 있는 한국 자체가 부담이고 또 기회다.

한·중 수교 이래 수십 년 아니 수천 년간 차이나 쇼크는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알아야 한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4억 인구 세계 최대 인구강국이다. 국토의 면적은 한국의 약97배 이상이다. 23개 성과 5개 자치주 상당수가 한국보다 크고 인구도 많다. 넘쳐나는 인력 덕분에 세계 최고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비견될만한 경제대국이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면 단연코 ‘성경’이다. 그 다음은 놀랍게도 20세기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마오쩌둥 어록’이다.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이지만 ‘제로섬의 저자’ 레스터 서로우의 경고는 의미심장하다. “역사상 자주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이웃국가 중국과 일본에 끼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오랜 세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인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타국에 전가해 온 미국조차 마냥 편한 상대만은 아니다.

‘핑퐁외교’는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온 중·미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 미국은 당시 ‘철의 장막’ 소련과 ‘죽의 장막’ 중국사이의 분쟁에 편승해서 중국과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1971년 4월10일 미국탁구선수팀이 중공을 방문, 역사적인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이윽고 1972년 2월21일 당시 닉슨 전 미국대통령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중국

을 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양국이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미·중 관계는 급진전 1978년 12월 미국은 ‘자유진영’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 1979년 1월1일 중국과 수교했다. 당시 닉슨의 중공방문 발표에 한국의 박정희 전대통령과 국민들은 경악했다. 6·25전쟁 중 중공인민군의 인해전술로 1·4후퇴를 겪은 한국이 아니던가. 그런 중국과 한국은 1992년 타이완을 버리고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소식에는 북한의 고(故)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경악했다. “중국과 남조선관계에 대해 중국에서 결정했으니 그렇게 하라.” 북한의 김 전 주석의 체념이다. 장팅옌(張庭延) 초대주한 중국대사(1992-98)의 회고다. 2003년 후진타오 중국 총서기는 파월 전 미국국무장관과 파월의 고향인 뉴욕 브롱크스에서 핫도그를 사먹자는 등 외교수사로 이른바 ‘핫도그 외교’를 진행했다. 2005년 9월초 중·미 정상회담을 갖은 미국워싱턴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후진타오 리셉션 초대장은 몇 배 프리미엄이 붙었다. 중국의 당나라, 원나라 시절 황제가 로마를 방문한 것과 같다고나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이제 약소국이 결코 아니다. K-문화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고 세계 230여 개국 중 GDP 12위 국가이며 교역량 13위를 자랑하는 나라다. 인구도 5000만 명 29위권 국가다.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작은 변방국가 아니다.

같은 반도국가 이태리와도 판판이다. 주변국가가 수십 개로 쪼개진 이태리는 힘을 쓸데없이 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4강국 사이에서 한국은 늘 힘겹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29일 (금)	4월 1일 (월)	4월 2일 (화)	4월 3일 (수)	4월 4일 (목)
미	달	러	(USD)	1346.80	1347.40	1347.10	1353.00	1349.10
일	본	엔	(JPY)	889.48	890.11	888.32	892.69	889.88
영	국	파운	드 (GBP)	1700.34	1701.36	1689.73	1701.19	1707.08
캐	나	다	달 러 (CAD)	994.83	995.71	992.19	997.38	997.34
홍	콩	달	러 (HKD)	172.10	172.18	172.14	172.82	172.32
중	국	원	(CNH)	185.75	185.63	185.68	186.13	185.92
유	로	화	(EUR)	1452.93	1453.44	1446.25	1456.84	1462.02
호	주	달	러 (AUD)	877.44	879.58	873.59	881.41	885.95
싱	가	폴	달 러 (SGD)	997.67	998.81	995.86	1001.18	1000.9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56	285.19	284.86	284.57	283.72

## 시상금

**Q** 당사가 아닌 타회사(협력업체)에 품질우수 시상금을 지급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현금으로 지급예정인데, 세무적처리 고려점도 있는지요?

**A** 타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접대비로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입니다

**Q**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게되었는데요

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라는거랑
  2.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X) -> 기한후 신고로 한경우
- 2가지 방법이 서로 가산세가 다른가요?

**A**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 직원 영어교육비 처리 문의

**Q** 당사에서는 직원 영어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3~4개월 이상 진행됨에 따라, 연말에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해가 지나 교육이 종료 됩니다.

이 경우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비용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용역서비스가 종료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종료 되는 시점인 내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 비용 처리
2. 교육시작~연말까지 교육 비용을 분할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2회 나누어 발행 받아 비용 처리 (1번째 연말 시점, 2번째 교육 완료 시점)

**A** 월별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구매확인서 구매일 및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Q** 당사는 A사로 영세율(국내) 매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구매일 24/02/11

구매확인서 확인일자 24/02/12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4/03/01 자로 발행하였는데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3월10일까지 발급받으면 되므로, 공급일을 2월로 하여 3월1일에 발급하였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급일자를 3월로 하였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 설문조사 대가로 지급하는 상품권 기타소득 신고 여부

**Q** 본원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구매 및 전달은 외주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 최저한이라 과세는 되지 않지만 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Q** 기업 계좌 관리계정명을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는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T(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A**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구체적 금융상품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이나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금액만 결국 2.7%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으로 종결 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소득자 외에도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포함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고용의 불안전성과 소득금액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즉, 일반근로자와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의 구분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열거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로서 매시간, 매일별 근무조건에 따라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동일 고용주와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로 본다.

건설공사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일용근로자들은 일반 정규근로자와는 달리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데,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지급시 일급여액에서 15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일용소득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여기에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산출세액 = (일급여액 - 150,000원) × 6%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급여액이 20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① 산출세액 = (200,000원 - 150,000원) × 6% = 3,000원

② 원천징수세액 = 3,000원 - (3,000원 × 55%) = 1,350원

상기의 사례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200,000원의 일용소득금액에서 150,000원의 비과세금액(소득공제)을 공제한 50,000원에 대해 2.7%(= 6%×45%)를 적용하면 1,350원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루당 15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2.7%의 세율을 곱하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라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유권해석(법인46013-343,97.2.1)에 따라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일 지급시점의 지급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월단위로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을 지급받는 시점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가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540원 [(170,000원-150,000원)×2.7%]이 근로소득세가 되는데, 이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당을 30일간 합산하여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 5,100,000원(= 170,000×30일)이 되므로, 원천징수세액은 16,200원[(5,100,000-4,500,000)×2.7%]이 되고,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일당을 받더라도 매일 매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보다 세금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3%) + (미납세액×미납기간×2.2/10000)의 가산세를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여야 세제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쟁점	국민의힘
부담 완화는 초부자 감세	상속세	세계 최고 상속세율 낮춰야, 기회발전특구 이전하는 중기상속세 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준시가 4억원 → 6억원, 소득조건 완화)	부동산세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본공제 150만원 → 200만원 상향	소득세	배우자 소득공제 연소득 기준 100만원 → 300만원 완화



### 현 정부의 금융 관련 주요 감세

	기존	현 정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에 양도차익 20~25%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 50억원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 기타 250만 원) 이상 금융소득세 20~25%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이자 및 배당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 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지방세 포 함)에 합산	배당소득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분리과세 등 감면 검토



##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구분	비과세	감면
개념	과세권 포기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 경감
세금발생 유무	없음	감면세액의 20% 발생 (농특세)
세금신고 유무	없음 (단, 고가주택 비과세는 신고)	신고의무 있음
사례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 등



##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 지원

국가	보조금	세액공제
한국	-	투자액의 15%
미국	투자액의 10% 이상	투자액의 최대 25%
일본	투자액의 최대 50%	3년 이내에 생산성 10% 이상 올리면 10% 추진
대만	-	R&D 비용의 최대 25%, 설비투자액 5% 추가
유럽연합	개별 기업과 협의해 2030년까지 약 62조원 지원	-



## 나태함을 극복하는 법 7가지

### 1 나태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먼저 자신을 나태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보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가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2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 결정한다

만일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미루다가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취소하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정은 취소하는 것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 3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감독을 하면 어떻게든 일을 진행하게 된다. 스스로 시간표를 만들거나 마감기한을 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4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데도 꾸물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지금 바로 일을 시작해서 끝내버리자.

### 5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지혜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관심이 없거나 자기 분야와 동떨어진 일이어서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자신보다 그 일에 더 잘 맞고, 그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6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에 나선다

이득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큰 경우 대개 일을 미루게 된다. 눈앞의 이익보다 궁극적인 목표와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수익을 생각하면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열정을 쏟아 일할 수 있다.

### 7 좋은 습관을 기른다

자발적으로 나쁜 습관을 떨쳐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번 자리잡은 습관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므로 나쁜 습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내주지 않는다.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대표이사의 배당포기로 인해 초과배당을 받게 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등 주주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170, 2023.03.09

### 질 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전법규부가-410, 2023.08.17

### 질 의

- ◇◇ 대학교 병원1)(이하 "신청법인")은 의료보건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22.11월 ◆◆임상시험센터2)(이하 "쟁점센터")를 완공하여  
1) □□북도 ■■■시 ◎◎구 1순환로 776  
2) □□북도 ■■■시 ☆☆구 △△읍 △△생명으로  
- '23.3월 □□북도지사로 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정절차가 진행 중임  
• 쟁점센터는 '23년 하반기 개소예정인 신청법인의 사용인이 관리 운영하며,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음

### 질의

- 의료보건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의료보건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866, 2023.05.31

#### ■ 질 의

-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 발급하는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음
- 상기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 한 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질의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동 세액이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610, 2023.03.24

#### ■ 질 의

- 장애인 등을 위한 청각 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조기환급금 지급 5월 3일까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작와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및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이 25일 전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한다.

### 수술대 오른 '그림자조세'... 정부, 18개 부담금 일제 폐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림자 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담금은 기금 적립 성격으로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고 1960년대 7개, 2000년 102개, 현재 91개 수준까지 점차 늘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 원으로 이 중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 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 원)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외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 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 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중앙정부 기금에 속한다.

일부 부담금 폐지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개편이다. 정부는 부담금 효율을 3.7%에서 단계적으로 1%p 낮추는데,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 부담은 약 9000억원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폐지 등 국민 체감형 부담금 정비도 실시한다.

또한 복수여권 기준으로 최대 1만5000원으로 책정되던 국제교류기여금,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을 내야했던 출국납부금도 각각 인한다.

이번 정비로 국민들은 알지도 못했던 부담금 부담을 덜게 됐다. 실제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이 사라질 예정이다.

### 불복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법인... 4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국세청, 2024. 4

## <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라지는 점 >

- ❶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 ▶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면서 '23년 매출이 30%이상 감소 또는 ②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라도 '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5.2만개)
  - ▶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1.1만개)
    - ①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③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0.2만개)
- ❷ 분할납부 제도 도입
  - ▶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 가능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li> <li>• 납부할 세액 2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li> </ul>
분할납부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5. 31.까지)</li> <li>•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7. 1.까지)</li> </ul>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

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 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 → ('24년) 110만9천여 개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text{안분율} = \left( \frac{\text{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 2천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천여 개)이다.
  -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분	선정 기준	법인수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5.2만개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li> <li>-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li> <li>-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li> <li>-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li> <l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li> </ul>	1.1만개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0.2만개





- 한편, 「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9-9419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 지방소득세(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22년 12.6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22년 11.7조원)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 ~ 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 율	개인지방소득세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 조례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 지급 복권당첨금 : 복권 판매지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left[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right) +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 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 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 인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 고·납부

## 참고 2 -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개요

- (신고·납부기한) '24. 4. 30.(화) 까지 ※ 연결납세법인은 5. 31.(금)까지
- (대상법인) 12월 결산법인(전체 법인 중 약 94%) 중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  
법인 약 110.9만여 개\*로 추산(전년대비 약 4.4만 개↑)
  - \* 신고대상 법인 : ('22년) 99.9만개 → ('23년) 106.5만개 → ('24년) 110만9천 개(잠정)
- (신고방법) 위택스로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 전자신고 비율 : ('21년) 99.72% → ('22년) 99.8% → ('23년) 99.8%

#### □ 세정지원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등\*(6.5만개)에 대

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5.2만 개	1.1만 개	0.2 만개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이자비용 및 매출액 감소 등 고려 선정)

□ 분할납부 제도 도입

- 「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납부 제도 없음 (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 납부)</li> </ul>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중소기업은 2개월)</li> </ul>

□ 향후 계획 : 신고기간 운영 현황 모니터링 (4월)

#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국세청, 2024. 4

## 1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 국세청은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연혁 /

시 기	'14. 3월	'18. 2월	'20. 1월	'23. 2월	'24. 4월
내 용	(세 액) 1천만 원 (종 류) 이의, 심사 (납세자) 영세개인	(세액) 3천만 원	(종류) 적부 추가	(세액) 5천만 원	(납세자) 영세법인 추가

-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 국선대리인 직능별 구성('24. 3. 3. 현재) /

(명, %)

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324	275	84.9	18	5.6	31	9.6

- 지난해에는 청구세액 요건 완화로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0.4% 증가(+126건)하여 총 541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

(건)

구 분	'19	'20	'21	'22	'23
지원건수	237	415	396	415	541

- 세무대리인 미선임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인용률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른 인용률 /

(%)

구 분	'19	'20	'21	'22	'23
국선대리인 선임	22.9	21.0	17.0	20.3	16.3
세무대리인 미선임*	7.5	8.6	8.1	5.3	5.2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청구('23. 2. 28. 개정 전 3천만 원, '18. 2. 13. 개정 전 1천만 원)

## 2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초기 화면에 배치된 제도안내 배너 하단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화면으로 곧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선대리인을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불복대리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사례1)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4백만 원을 납부 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 확인서 및 녹취록, 금융거래 명세 등으로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2) 과세관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주택소유를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백만 원을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양도 당시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고 요양비용도 스스로 지급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임을 요양비용 수납대장, 계좌거래 명세, 자금출처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받음
- (사례3)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된 2곳 중 A업체는 퇴사하였다고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급여대장 등에 따라 근로사실 확인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백만 원을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A업체 근무하지 않았음을 A업체 직장동료의 퇴사사실에 대한 진술 확보, A업체 근무 당시 급여통장 내역, 급여대장 외 지급 증빙 없음 등으로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4) 과세관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무신고 등 가산세 13백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병세가 위중한 모친의 병시중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병원진단서, 요양원 퇴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취소 결정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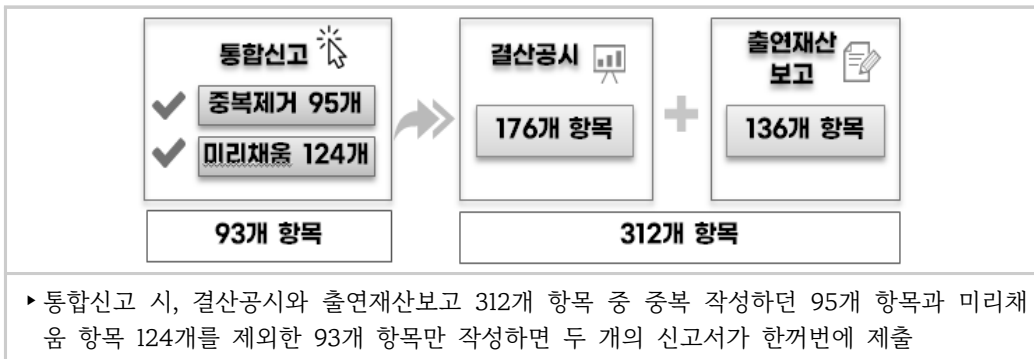
#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4. 3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중소기업 공익법인을 위한 주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 (신고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 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 TF 과제) 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Ⅰ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Ⅰ







-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지원)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석공시 지원) 중소기업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 \*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
    -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며,
    -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상을 제공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세무도움정보
  -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시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됩니다.
- (세법교육 확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접근경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납세자 세법교실 > 동영상 교육자료 > 법인세 > 공익법인 신고실무

	1차(공통)	2차(사회복지)	3차(학술장학)	4차(의료)	5차(공통)	6차(교육)
교육일정	4. 5.(금)	4. 8.(월)	4. 11.(목)	4. 12.(금)	4. 15.(월)	6. 4.(화)
신청기간	3. 28.~3. 29.	3. 28.~4. 1.	3. 28.~4. 3.	3. 28.~4. 5.	3. 28.~4. 8.	5. 29.~5. 30.
신청방법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온라인 세법교실 > 참가신청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소규모 공익법인 : ❶-❸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❶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❷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또는 수입명세서 제출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중규모 공익법인 : ❶-❹ (총자산 5-100억 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❹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규모 공익법인 : ❶-❺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❺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 참고 2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안내

- ① [들어가기] 홈택스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② [통합신고] ①공시/공개 등록 > 통합신고 작성 선택
- ③ [신고서작성] 01.기본정보부터 19.세무확인서까지 작성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 공시가 한번에 작성 및 제출 가능

## 참고 3 중소규모 공익법인 주석공시 지원

-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안(기획재정부 고시, 3.7~28. 행정예고 중)
- (개정내용)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필수적 주석기재사항(15종) 중 7종을 별도로 규정
  - \* (상증령\$50③단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미만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 &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학교법인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1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2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3	현물기부의 내용
4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5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6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7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 주석공시 지원 내용
- (주석 표준안 마련)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주석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태로 구성(국세행정역량강화 TF 과제)
  - (작성 매뉴얼 제공) 주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상세히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택스에 게시
  -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세무도움정보
  - (주석 작성화면 개발) 공익법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주석 기재사항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화면 개발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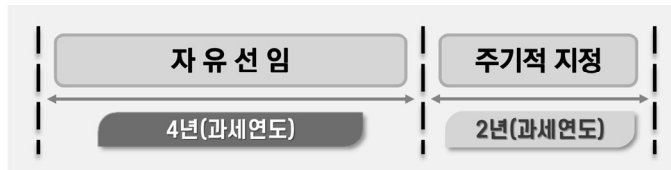
— 국세청, 2024. 4

##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 1-1 제도 개요(상증법 §50④)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국세청장에 위임)

\* ('19년 상증세법 개정)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시행



\*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과세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계산(상증세법부칙제16846호§7②, '19.12.31.)

### 1-2 지정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2)

- (지정회계감사대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 지정기준일 : 지정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째 되는 날

**예시**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가 2024. 1. 1. ~ 2024. 12. 31.인 경우

- 2022.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지정기준일은 2023년 11월 15일임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지정제외

- ① 지정기준일로부터 4 년 이내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기준위반 이 발견 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지정연기(상증칙 § 14의2)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 연기

- ① 지정기준일 현재,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 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 ②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 감리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감사인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 상증칙 시행(3. 18.) 전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까지 연기 가능[해당 공익법인은 지정 기초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2****감사인 지정 방식****2-1****감사인 지정방식**

- (지정기준)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지정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지정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은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감사인 지정

- (분산지정)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도 안분 하여 지정 가능

☞ (예시) '24년도 지정회계감사대상 공익법인이 총 30개인 경우, 6개 과세연도로 안분하여 지

정대상 첫번째 과세연도에는 5개 공익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순서)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순서대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 ☞ 감사인 지정점수 :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력점수, 교육이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상증칙에 따라 산정

$$\text{감사인 지정점수} = \text{경력 기간별 감사인 점수} \div (1 + 3n)$$

\* n : 지정 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0.1. 부터 다음 해 9.30. 까지 지정 예정 된 공익법인 수

- (2년차 지정) 지정대상 두번째 과세연도에 대하여 첫번째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을 다시 지정
- (지정배제) 지정대상 첫 번째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자유선임한 감사인은 배제하고 그 다음으로 점수 높은 감사인을 지정

각 회계법인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점수 순으로 배열

**I법인 220,000점, 법인 90,000점, 법인 50,000점**

1순위 : I법인 (220,000점)

2순위 : II법인 (90,000 점)

3순위 : I법인 (55,000점 =220,000/4)

4순위 : 법인 (50,000점)

5순위 : II법인 (22,500점 =90,000/4)

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자 산 규 모 ↓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회계법인	지정점수	지 정 점 수 ↓
	A공익	2조원	I법인	220,000점	
	B공익	1조원	II법인	90,000점	
	C공익	9천억원	I법인	55,000점	
	D공익	5천억원	III법인	50,000점	
	E공익	3천억원	II법인	22,500점	



## 3

## 감사인 지정 절차

## 3-1 지정절차 및 일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  
(2024 과세연도 12월 결산법인 기준)

'23.9.1.~9.14.	~ '23.10.18.	~ '23.11.1.	~ '23.11.15.	~ '23.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 기초자료 (공익법인 제출)</li> <li>지정감사인 신청서 (감사인 제출)</li> </ul>	⇒ 감사인 지정 예정통지	⇒ 예정 통지 의견 제출	⇒ 지정 감사인 확정 통지	⇒ 감사계약 체결
공익법인·감사인 → 국세청	국세청 → 공익법인·감사인	공익법인·감사인 → 국세청	국세청 → 공익법인·감사인	공익법인·감사인 → 국세청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는 매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진행

## 3-2 지정기초자료 제출

- 기초자료 :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

\* 총자산가액 최근 4년 감사인 선임방법, '22 과세연도 감사인 등 기재

※ 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제출 방법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주기적 감사인 지정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제출(공익법인)

● 기초자료 제출시 다음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 제출 가능

- 기타자료

- ①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
- ②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자

- 자료제출 면제 : 공익법인은 지정대상인 2개 과세연도중 두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총 4개 과세연도)

☞ (예시) 2023 과세연도와 2024 과세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 2024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 총 4개 과세연도에는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3-3 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 예정통지 :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
    - \* 지정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 개월 15 일이 되는 날(2024과세연도 감사인 지정 : 2023년 11월 15일)
  - 의견제출 : 예정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음
- 의견제출 사유
    - ① 지정감사인이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②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공익법인과 감사인 간 이견이 큰 경우
    - ③ 공인회계사법 직업윤리 위반 우려 등 감사인이 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3-4 확정통지 및 재지정 요청

- 확정통지 : 국세청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과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문서로 통지
  - 감사계약체결
    - 공익법인과 지정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지정감사인 계약체결일로부터 2 주 이내 계약서사본을 국세청에 제출
    - 공익법인은 재지정 요청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재지정 요청 사유
    - ①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② 지정 감사인이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4 지정 감사인 신청방법

### 4-1 지정감사인 신청

- 감사인 신청 : 지정을 원하는 감사인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 감사인 신청서를 제출
  - \*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 이수 실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등을 기재
- 신청요건
  - ① 과거 2년 이내\*에 소속 공인회계사 중 3인 이상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 교육 이수 실적
    - \*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2년 이내
  - ② 과거 5년 이내\*에 3개 사업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 \*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①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
- ※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제출 방법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주기적 감사인 지정 >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서(감사인)

### 4-2 감사인 지정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확정, 재지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③ 회계감리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 ④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 4-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text{감사인 지정점수} = \text{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div (1+3n)$$

\*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①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가) + (나) 매년 9 월 1 일 소속 공인회계사 기준

(가) 각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점수를 합산

(나) 과거 2년 이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수×110점

② 감사인으로 지정 받은 공익법인 수 :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 지정 예정 된 공익법인 수

※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

두 개 이상 감사인의 감사인 지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

○ 적용기준

① 각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점수 합계

②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감사인

③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먼저 한 감사인

## 5 주요 Q&A

### Q1. 감사인 지정대상 (4개 과세연도 자유선임) 판단방법

감사인 지정을 받는데, 자유선임 4개 과세연도는 어떻게 적용 하는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4개 과세연도는 개정 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산정 합니다.

(예시) '19~'22 과세연도에 자유선임한 경우 '23~'24 과세연도는 지정대상임

### Q2.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23년 선정 여부)

총자산가액이 1천억 원 이상으로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23 년에 모두 지정을 받게 되는 것인지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서대로 안분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Q3.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 자유선임 계약 시 감사인 지정 여부

지정대상 과세연도 (2024 과세연도 를 포함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인 지정 연기가 가능한



지?

감사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에 한해서는 지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상증직 시행일(3.18.)전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까지는 연기 가능[해당 공익법인은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 Q4. 분산지정으로 감사인 지정 시 자유선임 계약

분산지정으로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이 2년 계약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동 기간 중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분산지정으로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은 자유선임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5. 공익법인의 지정 기초자료 제출

공익법인은 지정 기초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에 지정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 법인의 '24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 기초자료 제출기간은 9.1.~ 9.14.이며 상증직[별지 35호 서식\*]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별지 35호 서식)

##### ① 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제출 방법

: 홈택스(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공익법인 제출)

##### ② 우편 제출 방법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담당]

**Q6. 감사인 지정 배제**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지정 기초자료 제출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지정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감사인은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되므로 지정 기초자료 작성시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인으로 선임하였거나 선임 예정인 감사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7. 감사인 지정방법**

감사인으로 지정되는 회계법인 등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감사인별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부터 총자산가액이 큰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합니다.

**Q8. 지정감사인과의 보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지 받은 감사인과 보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견제출] 예정통지를 받은 지정대상 공익법인과 지정하려는 감사인은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9. 회계법인 지점의 지정감사인 신청 가능 여부**

회계법인은 지점에서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정 감사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 지점의 경우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정감사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정감사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4. 3

-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 논의 (면제 심사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포함)
-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23.1월) 발표·시행 이후, 1,011개의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
- √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회계·상장·공시 부문에서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 5개를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4월 2일(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그리고 상장기업을 대표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하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23.1월)에 발표·추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하였다.

## <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4.4.2.(화) 09:30 /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
-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오늘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5월 수상

(예: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개사)

또한,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작년 제도개선 이후 올해가 예측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첫 해” 라고 말하며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 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고 강조했다. (세부내용은 보도자료 5페이지 참고)

####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등〉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하여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마련된 新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가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기업가치가 제고(Value-up)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하여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선정하게 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

'23.1월 정부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 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했다. 기업들의 배당절차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❶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❷이후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실제 취지에 맞춰 배당기준일 설정 및 배당액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신속한 정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15개 핵심지표에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업의 참여도 촉구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등을 기반으로 작년과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2,381개 대비 약 43%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작년에 정관개정을 해서 올해 현금배당시 절차 개선이 가능했던 기업 중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322개이므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약 34%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기업 현황〉

	전체*(A)	'23년 정관개정	'24년 정관개정 (진행중 포함)	합계(B)	비율(B/A)
코스피	791	180	159	339	42.9%
코스닥	1,590	601	71	672	42.3%
합계	2,381	781	230	1,011	42.5%

\* '24.3.15일 기준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 〈작년 정관개정 및 올해 배당실시 기업 중 실제 배당절차 개선 기업 현황〉

	'23년 정관개정	'23년 정관개정 & 올해 현금배당 실시(A)	배당절차 개선(B)	비율(B/A)
코스피	180	127	84	66.1%
코스닥	601	195	25	12.8%
합계	781	322	109	33.9%

정부 및 유관기관은 향후 배당절차 개선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정부 및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 24.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시 공개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계와 관련하여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공시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분야	인센티브	비고
세무 회계	① 5종 세정지원*	2.26일 발표
	②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신규
	③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신규
상장 공시	④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신규
	⑤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신규
	⑥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	신규
홍보 투자	⑦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2.26일 발표
	⑧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2.26일 발표

\* ①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 (②R&D공제 사전심사, ③법인세 감면 컨설팅, ④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⑤가업승계 컨설팅

한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성실 공시·이행 등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 참고

## 주요 QA

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간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되는 것 아닌지?

- Value-up 기업 표창시에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인 만큼,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동 표창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해 지정면제 평가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
  - \* 기업의 우수한 지배구조란 주주·채권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체계
- 특히, 상기 인센티브를 통해 회사들이 지배구조를 잘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
  - \*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23.2월, 자본연)
-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
  - \*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시 즉시 면제 철회
- 오히려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업 회계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금융감독원, 2024. 4

◆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하였음

\*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 1일로 도래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 (절차 명확화)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비
- (심의기능 강화) 중요사건에 대해 사전 심의 회의 신설
- (방어권 보장) 위반사항 조기 정정시 incentive, 조치예정사항 대면 설명

②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 (감시 강화) 고의적 위반 가능성 높은 기업, 시장영향력 큰 기업 감시 집중
- (효율성 제고) 테마심사를 확대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신속히 업무 수행
- (시스템·디지털화) 디지털 감리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 등 마련

③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 (등록요건 감독강화) 통합관리 등 중점 점검 및 부적격 회계법인 엄정 조치
- (맞춤형 감리) Big4 사전 감리기간 등 회계법인 특성에 맞는 차등 감리
- (감사역량 제고)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등 감사역량 제고 유도

✓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에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160사,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실시 예정

< 기 본 방 향 >

◆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

Robust (탄탄한)	감리 절차 명확화, 사전 심의기능 강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한 탄탄한 회계 감리체계 확립
Vigilant (빈틈없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대 회계리스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심사·감리 실시
Strict (엄정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업계 체질개선 등 엄정한 규율 확립

1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 ㉠ (절차 명확화) 모든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하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규정\*·매뉴얼 정비
  - \* 현장감리 등 실무적인 감리절차를 시행세칙 등에 명확화
  -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 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
- ㉡ (심의기능 강화)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 운영
  - \* 조치수준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안건 대상(필요시 산업전문가 포함)
- ㉢ (방어권 보장)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Incentive 부여방안 마련
  - 사전통지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 사전통지 이후 피조치자 요청할 경우 대면하여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

2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 ㉠ (감시 강화)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시장영향력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 적극 실시
  - \* 회계부정 제보, 언론보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부적정 등

- ㉞ (효율성 제고) 테마심사\* 회사수를 확대하여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

\* ('24년 주제)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 CB 콜옵션, ③ 장기공사수익, ④ 우발부채 공시

- ㉟ (시스템·디지털화) 내부 심사·감리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디지털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분석시스템 마련\*\*

\* 심사·감리 대상선정후 조속히 착수, 심사 착수시 중요 단계별 목표처리기한 설정 등

\*\* 감리자료에 대한 분석·검색 기능 강화, 회사별 회계자료 형식 차이 조정 시스템 개발 등

### 3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 ㉠ (등록요건 감독강화)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선순환을 유도

- ㉡ (맞춤형 감리) 시장 영향력이 큰 Big4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 개선

\* 본 감리前 현장 1주+자료분석 2주(총 3주) 기간을 통해 충실한 감리 준비

○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주기에서 2년으로 단축

- ㉢ (감사역량 제고)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

\* 금감원·회계업계·기업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감사지원 TF」 운영('23.11월~)

## II 심사·감리 실시대상

- ◆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가능

###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 감리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6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



- 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
  - \*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
-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예, 10년이상), 상장예정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 \* ①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전환사채(CB) 콜옵션, ③장기공사수익, ④우발부채 공시('23.6.13. 보도자료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 예정
  -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나. 감사인 감리\*

- \*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
- 14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4사, 다군 7사, 라군 1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실시
  -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사를 우선 선정 후,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5사를 추가 선정
  - 감리대상 선정 회계법인에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 예정
    - \* 회계법인 소속 군(群) 등을 감안하여 3~7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감사인 감리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
  - \* (중점 점검항목) ① 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 ②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 ③ 비감사용역 제공 등 관련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운영 여부 ④ 감사정보 유출차단 정책·모니터링 등의 적정성
  - ⑤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 \*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3.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4회 공동검사 실시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 금융감독원, 2024. 4

## - 주요 내용 -

◆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22년말 자산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3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3년중 54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기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위반시 제재)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  
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합니다.

## 1 제도내용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  
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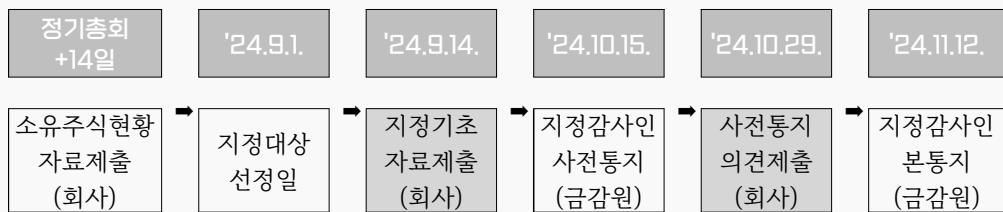


- \*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목적)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택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24년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일정(안)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가 직접 제출(☞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① 공문, ②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③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참조

- (위반 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 가능(외부감사법 § 29①제2호)

## 2

### 유의사항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and
- ②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4.까지)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되,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 (외부감사규정 §15③)

####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

- ①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 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 전화문의 : (02) 3145-7761/7975

## 참고 - 제출방법 안내

### 1 첨부서류

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2.1.1
2.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 제출 방법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을 클릭
-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등 작성
  -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참고
-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